

# 온난화 시대

워싱턴에서 2월 5일부터 개최된「기후 변동에 관한 정부간회의」(IPCC)의 제3회 전체회의에서 가장 주목된것이 제3분과의 논의라 한다. 다른 2분과가 지구온난화의 과학적예측과 기후변동에 따른 영향을 검토한것을 받아서 세계각국이 어떤 대책을 세울것인가라는 「전략」을 검토하였다.

이 분과의 조정역할을 하는 미국에서도 최근「온난화방지는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이며 대책자금을 얼마쯤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라는 비용대효과분석이 많이 대두되었다.

## ○ 경제이론으로

부시대통령의 모교 예일대학. 여기서 거시경제학을 가르치는 윌리암. 노타우스교수는 1970년대의 후반부터 기후변동과 경제활동의 관계를 연구하여 미과학아카데미. 지구환경 온난화점토위원회의 회원으로 근무하여 최근「온실효과의 경제학」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논문보고에 따르면 어느정도 이산화탄소를 삭감하면 비용대효과가 최대가 된다는 분석. 환경파괴에 따른 경제손실이 대책비용을 상회하더라도, 대책비용이 온난화피해보다 높지 않으므로 이산화탄소를 삭감하면 경제적으로 「최적의 선택」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기후변동 예측중에서 중간값인「다음세기 후반기에 평균기온이 약3℃상승」을 예상하면「20~25%의배출 삭감이 타당」이라고 계산되고있다.

## ○ 불확실성

이 모델은 미국사회를 기초로 다음세기도 산업구조가 같다는 전제와 시장경제로 환산되지 않는 절멸 동식물증가나 경관저하등 마이너스 요인은 피해산정에 넣지 않았다. 또한 기후변동 모델자체

에 불확실성이 있기때문에 온난화의 피해도 불확실성을 떨치지 못하고 있어 노타우스교수는 이 모델을 아직까지 점정적인 위치에 있다고 한다.

## ○ 대책의 토대로

그렇지만 비슷한 모델을 연구하고 있는 그룹을 미국내에서만도「12단계정도이다」라고 하는데, 금후 장래의 대책을 구상하는 토대로 활용할수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학적 분석에 대해 반발도 많다. 1월 24일 환경보호단체 주최로 미 상원의원회관내에서「지구환경과 경제」를 주제로 공개토론회가 개최되어 참가한 환경보호파의 코아 상원의원은 의회에서 심의중인 대기정화법개정안을 둘러싼 비용논의를 소개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피해등을 어떤손해액으로 산정할것인가」를 지적하고 단순히 금액표시로 하지 않고 환경파괴에 의한 손해로서 산정할것을 강조하였다. 노타우스 교수와 최근 2번에 걸친 라디오에서 토론한 아번크. 민차교수는 「국지적인 기후변동 예측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미국을 모델로 한 분석을 다른나라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지적. 또한 종래의 경제 모델 연장으로 비용대효과를 계산하는것은 아니고, 이산화탄소 삭감과 동시에 수입석유의존도를 감소하는 에너지절약기술의 개발, 이산화탄소 삭감과 함께 토양보전, 수질보전도 병행해서 식물등 다각적인 이익을 도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자료는 일본 아사히신문 1990년1월29일자에 게재된것을 발췌. 번역 게재한 것입니다. -정리 : 옥삼복)